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속도 내는 박근혜

4·24 총파업으로

박근혜 공세에 제동을 걸자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연초 지지율이 휘청거렸는데도 박근혜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이를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자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첫째, 대타협기구(공무원연금)와 노사정위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3월 말 시한에 맞춰 '합의'를 만들어내고, 4월에 개악 강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이 좋아 '합의'이고 '대타협'이지, 노사정위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수단일 뿐이다. 노사정위 논의의 기초가 될 전문가 공익위원안이 정부안과 '판박이' 수준인 것만 봐도 뻔히 알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은 민주노총의 투쟁적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겐 상식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타협기구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공무원 단체들과의 합의에 따른 것인 양 모양새를 만들고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것일 뿐, 대타협기구 안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생각은 전혀 없다.

박근혜는 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를 이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전선을 교란시키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렛대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비롯한 공세를 더 가속화하려 한다.

이런 박근혜의 '작전'을 무력화하려면 우리 편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타협기구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를 거부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무원노조도 함께 나서야 한다.

둘째, 사악한 인간질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는 틈만 나면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 고통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정당화하고 있다.

노골적인

고용노동부는 어제(19일) 주요 일간지 1면 하단 광고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라는 노골적인 카피를 뽑고, 장그래 역배우를 내세웠다. 노사정위 위원장 김대환은 하루 전날 고려대에서 같은 취지의 강연을 했다.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얘기를 흘리는 것도, 박근혜가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통과를 미룰 것처럼 말하는 것도 모두 갈라치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청년과 장년을 이간질하고, 시간차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를 각개 격파하려 한다.

이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요구를 모두 걸고 함께 총파업에 나서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응은 없다.

이런 투쟁으로 정부의 공세에 제동을 건다면, 실업과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청년들도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

현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

여전히 총파업에 회의를 나타내는 활동가들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반노동 공세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대규모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분명하다. 이럴 때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잠재력과 사기를 더 갇아먹을 뿐이다.

다행히 현장 분위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민주노총 임원들이 현장을 순회하며 진정성 있게 파업을 호소하면서 투쟁에 대한 기대가 자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간부와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실질적인 파업 조직에 나선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4·24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고 공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설 힘과 자신감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4월 24일에 맞춰 모두 파업에 돌입하고, 규모가 크고 위력적인 파업 집회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의 공세에 제동을 걸려면 하루 총파업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4·24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성사돼 조합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효과를 낸다면, **4·24 총파업은 투쟁을 더 전진시키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지금 시리자가 집권한 그리스에서는 지난 5년 동안 32번의 총파업이 있었다. 처음에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호소하는 총파업으로 시작했지만, 노동조합 내 전투적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주도력이 높아졌다. 그것이 수십 차례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정권을 네 번이나 무너뜨린 비결이었다.

현장 간부와 활동가들은 긴 눈으로 멀리 내다보며,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주도력을 높여 나가고자 애써야 한다.

임금 올리자는 최경환의 립서비스

노사정위 3대 핵심과제는 죄다 임금 삭감 위한 것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지난 3월 4일 “디플레 우려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은 곧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급작스레 기준금리를 2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인하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퍼센트대로 낮춘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내수 활성화 운운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한 진정한 이유는 환율 인상원화 가치 하**

락)으로 기업들의 수익을 높여 주려는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 전셋값이 올라가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 이미 1천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를 더욱 키울 위험이 크지만,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이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수익을 높여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임금 인상 운운한 것은 립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최경환은 최근에 “임금 인상이 정부 바

람이지만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발 물러났다. 무엇보다, 3월 말까지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합의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노사정위에서 다루고 있는 3대 핵심과제(통상임금, 노동시간, 정년연장)는 죄다 임금을 삭감시키는 조처들이다. **통상임금 범위 협소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리는 것이 바로 임금 삭감 효과다.**

만약 최경환이 진정으로 임금을 올리려거든 이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의 갈라치기 공격에 단결로 맞서야 할 이유

박근혜는 경기 불황 심화로 노동자 주요 부문을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고립시켜 공격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파상공세를 퍼고 있다.

대신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상이한 노동자 부문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는 전략을 내놨다.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정규직은 “과보호”로 비난하는 이유다.

이런 정부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규직 “과보호” 비난 — 왜 전체 노동자를 겨냥한 것인가?

박근혜는 대기업 노조를 ‘악’으로 몰며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겠다는 내놓은 조처들은 실제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들이다.

가령, 정부는 해고요건 완화와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을 위해 법을 손보고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개악하려 한다. 이렇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무너지면, 무조노·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말로 사측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악 — 왜 민간부문도 반대해야 하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 도미노의 포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손보려 한다.

또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단협 개악 등을 우선 성공시켜,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 한다. 만약 정부가 공공부문 공격에 성공하면, 민간기업주들도 힘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 방어는 민간부문의 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양산 — 왜 정규직의 문제인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 확대는 저질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규직의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는커녕, 이를 핑계로 정규직의 임금 인상 자제, 생산성 향상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확대 저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극 연대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에 대한 ‘이기주의’ 비난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 왜 단사 임단투만으로 막기 어렵나?

박근혜는 사업장별로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제공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노조 동의권 축소와 시정명령 등을 통해 그간의 단협 관행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부는 단협 실패를 발표하며, 전환배치·해고에 관한 노사합의 규정, 성과연봉제 미도입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따라서 사업장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모두 함께 단결해 싸워야 한다.

